

KIPEC BRIEFS

미국의회 주요동향



목차

1. 의회 일정 및 소식	2
2. 연방의회 주요 입법 동향	3
3. KIPEC 제2차 라운드테이블(조단 타마, 아메리칸대 교수 초청)	5
4. 비상상황에서의 미국의회	8
5.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현황.....	9

9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10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음영 표시 : 의회 회의

- 해리스-트럼프 대선토론 (10일)
- 브론슨 주한미군사령관 인사청문 (17일)
- 휴회 (~11.11)

□ 10월 주요 의회 및 정치 일정

휴회

11월 선거를 앞두고 10월은 의회가 휴회에 들어감.

부통령후보(월즈-밴스) 대선토론

10월 1일 민주당 부통령후보인 팀 월즈와 공화당 부통령후보인 JD밴스가 토론을 가짐. 경제정책, 기후변화, 2020년 선거불복, 국경안보 등에 대한 논쟁이 있었음. 토론에서 상호비난은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여론조사에서는 JD밴스가 소폭 더 좋은 평가를 받았음.

□ 그 밖의 최근 주요 소식

사전투표 개시

투표일은 11월 5일이나, 각 주(50개주 중 47개 주)별로 사전투표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예정이며, 특히 9월 20일부터 미네소타와 사우스다코타는 가장 먼저 사전투표가 시작되었음.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의회 관찰자 접근 법안 (H.R.6513)	공포 (2024.10.4)	Mike Carey (공-오하이오) (2023. 11. 30)	하원직원이 선거를 관찰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선거절차에 접근하고 관찰할 수 있지만, 투표용지나 장비를 다루는 등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행위는 금지
반도체 산업 촉진 법안 (S.2228)	공포 (2024. 10. 2)	Mark Kelly (민-애리조나) (2023. 7. 11)	미국내 반도체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 검토를 간소화하고 특정 프로젝트를 환경 법에서 면제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발전을 강화
의회예산처 데이터 접근 법안 (S.1549)	공포 (2024. 10. 2)	Gary C. Peters (민-미시간) (2023. 5. 10)	의회예산처가 1974년 프라이버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도록 하여 연방 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함
대통령 보안 강화 법안 (H.R.9106)	공포 (2024. 10. 1)	Michael Lawler (공-뉴욕) (2024. 7. 23)	비밀경호국은 대통령, 부통령 및 주요 후보를 보호하기 위한 요원 수를 동일한 기준으로 결정해야 하며, 주요 후보는 국토안보부가 의회지도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국토안보부 합동 작업 부대 재허가 법안 (S.4698)	공포 (2024. 10. 1)	Gary C. Peters (민-미시간) (2024. 7.11)	기존 기한을 2024년에서 2026년으로 연장하며 각 태스크 포스에 대한 인력 계획 제출과 성과지표보고를 의무화하며, 국토안보부 장관이 정기적으로 관련 위원회에 브리핑하도록 규정함
잉여 자산 재사용 법안 (S.2685)	공포 (2024. 10. 1)	Gary C. Peters (민-미시간) (2023. 7. 27)	미국 총무청(GSA)은 연방 기관의 잉여 자산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며, 연방 기관이 잉여 자산 활용을 위한 내부 지침을 공개하도록 규정
디지털 무역법 (H.R.9876)	발의	Carol D. Miller (공-웨스트버지니아) (2024. 9. 27)	미국의 디지털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한민국에 특정 제한을 부과할 수 있는 행정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한국이 플랫폼 경쟁 촉진 법안(PCPA) 또는 미국기업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다른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미국 무역대표부는 그 영향을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

법률(안)	심의현황	대표발의자 (발의일)	주요내용
중국 무역 제재 법안 (S.5264)	발의	Tom Cotton (공-알칸소) (2024. 9. 25)	중국과의 정상 무역 관계를 일시 중단하고, 중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높여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고 미국 경제와 산업을 보호하려는 법안
중국 투자 금지 법안 (S.5237)	발의	Pete Ricketts (공-네브라스카) (2024. 9. 25)	인덱스펀드가 중국 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여 미국 투자자와 경제를 보호하고, 중국기업과의 금융적 연계를 줄이려는 법안
행정조치 비용 투명성 법안 (H.R.9751)	하원 예산 위원회 (2024. 9. 25)	Ron Estes (공-캔자스) (2024. 9. 23)	의회예산처(CBO)이 특정 행정 및 사법 조치를 예산 기준 계산에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으로 1985년 균형 예산 및 비상 적자 통제법의 조항을 수정함.
자연재해 복구 프로그램 법안 (H.R.9750)	하원 교통 및 인프라 위원회 회부 (2024. 9. 25)	David Rouzer (공-노스캐롤라 이나) (2024. 9. 23)	대통령이 주 및 인디언 부족에 재해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주요 재해 발생시 사용될 자연재해 회복 준비금을 설정하는 법안.
정부 데이터 관행 현대화 법안 (S.5109)	상원 국토안보부 및 정부업무 위원회 회부 (2024. 9. 25)	Gary C. Peters (민-미시간) (2024. 9. 19)	연방 정부의 데이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AI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안
중국 제재 법안 (H.R.3334)	하원 본회의 의결 (2024. 9. 25)	Lisa C. McClain (공-미시간) (2023. 5. 15)	STOP CCP Act는 중국 공산당(CCP) 중앙위원회 구성원 중 1)홍콩의 자율성 침해 2)대만에 대한 위협, 군사 훈련 및 공격 3)미국 지적 재산 침해 4)위구르 무슬림 인구에 대한 집단 학살에 관여한 인물에게 비자 및 자산 동결 제재를 부과하도록 대통령에게 요구
전략 무역 법안 (S.5131)	발의	James E. Risch (공-아이다호) (2024. 9. 19)	미국의 무역 정책을 강화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며, 국제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보장하는 프로그램 개발

한미의회교류센터(KIPEC) 라운드테이블 소개

한미의회교류센터는 (KIPEC) 2024.09.25 오전 9-11시 (미 동부시간) 제2회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지난 제1회 라운드테이블에 이어 조단 타마¹ (Jordan Tama) 아메리칸대 교수를 초대해 한미 의회가 행정부의 국방정책에 관여하는 범위 및 방안을 비교, 분석했다. KIPEC 측에서는 김동현 연구원이 대한민국의 사례를 발표했고, 화상 연결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 관계자와 2024 한미의회청소년교류 참가자 등 약 15여명이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했다.

라운드테이블 내용 요약

미 헌법은 외교정책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에게, 일부는 의회에 부여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그 권한을 나누게 된다.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국가를 대표해 조약을 협상하고 외교정책 관련 인사 임명권을 가진다. 의회는 전쟁선포권, 조약승인권 및 대통령 임명 인사 승인권, 예산안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진다. 무력 사용 관련 대통령이 주요 정책 결정자이지만 의회가 때로는 그러한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거나 제한하기도 한다. 외교/국방 정책 예산은 대통령이 어젠다를 정하지만 의회가 주요 정책 결정자다. 대통령은 무역 관련 협상을 하지만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경제 제재와 관련해서는 대통령과 의회 모두 권한을 보유한다.

외교/국방 정책에 의회의 역할은 장단점이 있다. 장점으로 의회가 정책 관련 심도깊은 토론의 장을 제공하며,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견제하고, 행정부의 올바른 정책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며, 의회가 때로는 정책의 혁신을 시작한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의원 개개인이 국익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때로는 개별 의원들이 외교/국방 정책

에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과 의회 사이의 '창의적인 긴장감'이 더 나은 정책을 만들게 된다. 외교/국방 정책에서 양당 소속 의원들의 의견일치 또는 협의를 통한 소당적 협력은 중요하다. 첫째, 소당적 협력은 국제적으로 중요한 이슈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유리하다. 둘째, 의회 내 소당적 협력은 정권 교체가 외교/국방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한다. 셋째, 소당적 협력은 국제적인 합의에 보다 더 나은 안정성을 제공한다. 넷째, 소당적 협력은 적국이 미국 내 선거에 개입할 인센티브를 줄인다.

의회 내 외교/국방 정책 관련 양극화와 소당적 협력은 다양한 양태를 띤다. 첫째, 양극화는 (Polarization) 양당 소속 의원들이 특정 쟁점에 정반대의 입장에 있는 형태다. 둘째, 소당적 친-행정부 합이는 (Pro-presidential bipartisanship) 양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소당적으로 지지하는 형태다. 셋째, 소당적 반-행정부 합이는 (Anti-presidential bipartisanship) 양당 소속 의원들이 대통령의 입장을 소당적으로 반대하는 형태다. 넷째, 당내 분열파간 소당적 협력(Cross-partisanship)은 당내 의견이 분열되었을 때 당이 다를지라도 의견이 일치하는 의원들끼리 소당적 협력을 맺는 형태다.

사례 1: 시리아 개입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2013.9.4 미 상원 외교위는 시리아 무력사용권한승인 (이하 AUMF,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결의안²을 10-7 (찬성-반대)로 통과시켰다. 상원 외교위는 2013.8.21 시리아 행정부가 화학무기를 사용해 1,400여명 이상의 민간인을 살상한 이후 오바마 행정부가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판단해 미 의회에 AUMF를 요청한 뒤 위 결의안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가 당파적 경향성을

¹ 조단 타마 아메리칸대 교수는 미 외교안보 정책결정과정 전문가로 미 의회의 양극화와 소당적 협력, 대통령-국회 관계, 경제 제재 활용방안 및 대중과 엘리트의 외교 정책 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타마 교수는 총 5권의 책을 출판했으며 2024년 옥스퍼드대 출판사에서 *Bipartisanship and US Foreign Policy: Cooperation in a Polarized Age* 신간을 발표했다. 타마 교수는 미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 펠로우, 리 해밀튼 전 하원의원 외교안보 스피치라이터, 2008

오바마 대선 캠페인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다. 타마 교수는 윌리엄스 칼리지에서 학사 학위를, 프린스턴대에서 석,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타마 교수 프로필 링크:

<https://www.american.edu/sis/faculty/tama.cfm>

² S.J. Res. 21, Authorization for the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the Government of Syria to Respond to Use of Chemical Weapons (113th Cong.)

따를 것이라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찬성표 10(민주 7, 공화 3), 반대표 7(민주 2, 공화 5)로 당내 분열 투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아랍의 봄 이후 중동 정세 및 미국 행정부의 개입 여부를 둘러싼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내 의견 분열과 당적은 다르지만 정책적 의견을 같이하는 양당 의원간 초당적 협의를 (cross-partisanship)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시다.

시리아의 화학무기 사용 이후 오바마 행정부는 시리아 군사시설 및 화학무기 부대를 대상으로 공중 타격을 준비하면서도 의회에 AUMF를 요청했다. 2013.08.31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성명³을 통해 “우리는 군사 타격을 할 준비가 되어있지만 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헌법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미국 국민을 대표하는 미 의회로부터 무력사용승인을 받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러한 결정은 중동 무력 개입을 꺼려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성향과 무력 개입 실패 시 의회로부터의 비판을 홀로 감수해야한다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미 의회에 AUMF를 요청했던 오바마 행정부와는 반대로 트럼프 행정부는 2017.4.6 시리아 아사드 정권이 화학무기를 사용해 80여명의 민간인을 살상한 직후 의회의 AUMF를 요청하지 않고 59대의 크루즈 미사일을 사용해 시리아 화학무기 군사시설을 타격⁴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 의회는 오바마 행정부 당시 택했던 미 행정부 군사 개입에 우호적인 입장을 취했다. 다만 당시 하원 민주당 대표인 낸시 펠로시 의원은 시리아 군사시설 타격은 적절한 응징으로 보이나 향후 미국의 시리아 군사 개입은 미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함을 강조했다.

³ The White House, “Statement by the President on Syria” (August 31, 2013),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the-press-office/2013/08/31/statement-president-syria>

⁴ <https://www.npr.org/2017/04/06/522948481/u-s-launches-airstrikes-against-syria-after-chemical-attack>

⁵ 2001년과 2002년 미 의회를 통과한 무력사용승인권한은 (AUMF) 조지 W. 부시 행정부 당시 9.11 테러와 이라크전을 위해 개시됐으나 이후 수많은 미국의 군사개입에 법적인 근거가 되어 ‘백지수표’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사례 2: 무력사용승인권한 (이하 AUMF,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개정 논쟁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2018.4.16 밥 코커 상원의원과 (공화당-테네시) 팀 케인 상원의원은 (민주-버지니아) 초당적 합의를 통해 ISIS, 알카에다, 탈레반에 무력사용을 승인하고 2001/2002년 미 의회가 승인한 AUMF⁵를 취소하는 내용의 결의안⁶을 발의했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AUMF를 확대하거나 축소하려는 다양한 시도 중 대표적인 예다. 오바마 행정부와 트럼프 행정부 모두 의회로부터 행정부의 AUMF를 개정하려는 시도에 직면했지만, 두 행정부의 대응은 다소 달랐다.

오바마 행정부 당시 ISIS가 미국 기자 두 명을 참수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2014.08.19, 2014.9.2) 의회에서 AUMF개정 관련 논의가 시작됐다. 존 케리 국무장관은 2014.09.17-18 미 의회 청문회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2001 AUMF관련 논의를 환영하지만 알카에다로부터 파생된 ISIS 관련 군사대응은 2001 AUMF의 일부라는 입장⁷을 밝혔다. 팀 케인 상원의원은 2002 AUMF를 즉시 폐기하고 2001 AUMF를 2년 후에 폐기하면서 미 행정부의 대ISIS 무력사용을 1년간 승인하는 내용의 결의안⁸을 소개했다. 일부 의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의원들은 새로운 AUMF 관련 표결을 꺼려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의원들이 AUMF 법안 투표에 관여하게 되면 자신의 선거운동에 불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AUMF 법안에 찬성할 경우 실패한 군사작전에 책임을 나눠야하고, 새로운 AUMF 법안에 반대할 경우 미국을 테러로부터 지키지 못했다는 비난에 직면할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오바마 행정부 당시

⁶ S.J. Res. 59,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of 2018 (115th Cong.)

⁷ . Hearing Before the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United States Strategy to Defeat 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S. Hrg. 113-668 (September 17, 2014), 16; Hearing Before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Foreign Affairs, “The ISIS Threat: Weighing the Obama Administration’s Response,” Serial No. 113-219 (September 18, 2014)

⁸ S.J. Res. 44,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the Islamic State in Iraq and the Levant (113th Cong.)

AUMF 개정 논의는 결국 실질적인 입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팀 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버지니아) 제프 플레이크 상원의원은 (공화-애리조나) 알카에다, 탈레반, ISIS와 연계 무장 단체에 무력사용을 5년간 승인하되 대통령의 군사행동 확장을 제한하며 2001/2002 AUMF를 대체하는 내용의 결의안⁹을 발의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의회로부터의 AUMF 개정 움직임에 일말의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공화당 지도부는 공화당이 과반을 차지한 하원에서 AUMF 변경에 관련된 법안의 통과를 적극적으로 막았다. 랜드 폴 (공화-켄터키) 상원의원은 2001/2002 AUMF를 6개월 이내에 폐기하는 내용의 회계연도 2018 국방수권법안 수정안¹⁰을 발의하면서 2001/2002 AUMF를 제한하지 않으면 전쟁이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 하지만 존 매케인 (공화-애리조나) 상원의원은 새로운 AUMF의 통과 없이 2001/2002 AUMF를 폐기하는 것은 미국 국가 안보를 위협할 것이라며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사례 3: 대러시아 제재 (오바마, 트럼프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당시 미 의회는 러시아 정부 관료의 조직적 세금 탈루 의혹을 조사하다가 러시아 정부에 의해 체포, 구금되어 사망한 세르게이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이름을 딴 마그니츠키 법을 제정한다. 오랫동안 인권 보호에 관심을 가져온 벤 카딘 (민주-매릴랜드) 상원의원과 짐 맥거번 (민주-매사추세츠) 하원의원은 마그니츠키 변호사의 죽음에 관련된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 거부와 자산 동결 등의 내용을 포함한 마그니츠키 법안¹¹을 발의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해당 법안이 러시아와 협력관계를 구축하려는 러시아 리셋 정책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2012년 6월 상원 외교위와 하원 군사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한다. 이는 미 의회가 행정부보다 외국 정부와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고서라도 인권 보호라는 원칙을 고수하는 경향성을 보여준다.

2017.1.16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전 언론 인터뷰¹²에서 대러시아 제재를 완화할 의향이 있음을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러시아 제재는 오바마 행정부와 미 의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인권 침해 및 선거 개입에 대응한 조치로써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는 미 의회로부터 초당적인 비판에 직면했다. 이에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각 10명의 상원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미 선거 개입 관련 러시아 관료, 기관 및 사업체를 겨냥한 대러시아 신규 제재 법안¹³을 신속하게 통과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에 해당 법안이 러시아와의 협상 여지를 좁히고 대통령 권한에 비헌법적인 제한을 가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지만 하원에서 419-3 (찬성-반대), 상원에서 98-2 (찬성-반대)로 압도적으로 가결¹⁴되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 의회에 압도적인 법안 가결에 거부권을 행사하지도 못하고 법안에 서명하게 된다.

⁹ S.J. Res. 43, Authorization for Use of Military Force Against Al-Qaeda, the Taliban, and the Islamic State of Iraq and Syria (115th Cong.)

¹⁰ . S. Amdt. 871 to S. Amdt. 1003 to H.R. 2810,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18 (115th Cong.)

¹¹ H.R. 6365 and S. 3881, The Justice for Sergei Magnitsky Act of 2010 (111th Cong.)

¹² Michael Gove, "Donald Trump: 'Brexit Will Be a Great Thing . . . You Were So Smart,'" The Times of London (January 16, 2017)

¹³ . S. 94, Countering Russian Hostilities Act of 2017 (115th Cong.)

¹⁴ House Vote 413 and Senate Vote 175 on H.R. 3364, Countering America's Adversaries Through Sanctions Act (July 25, 2017, and July 27, 2017)

비상 상황에서의 미국의회: 기능 유지와 헌법적 과제 (9.3)

배경 및 문제인식

미국 의회는 지난 20년간 여러가지 사건에 직면해 왔음. 9.11테러 공격, 탄저균 오염, 의회 및 직원에 대한 폭력, COVID-19 팬데믹 그리고 기상 관련 문제들이 모두 의회가 비상사태에 대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강조함. 비상계획(contingency planning)은 의원교체 및 리더십 승계와 같은 문제를 포함하며, 특히 의회가 지속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임. 특히 대규모 사망 사건이 발생할 경우 정족수(quorum)를 충족하지 못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또한, 이런 사건들은 의회가 헌법적인 책임을 수행하는데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정책 및 행정적 대응

특히, 9.11 테러 공격 이후 운영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및 행정적 노력이 이루어졌음. 하원은 보궐선거 및 정규선거가 실시될 때까지 의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원의원에 대한 신속한 교체 필요성에 집중하였음. 제108회 의회(2003-2004) 시작 시, 하원 의장이 공석일 경우를 대비한 임시의장(Pro Tempore)제도를 마련함. 이는 비상상황에서도 하원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장치이며 규정에서 지정된 의원은 의장 또는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임시의장으로 활동하며,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필요한 경우 의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명시됨.

상원과 하원은 테러공격이나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 안전이 위협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휴회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음. 또한 비상상황에서 의회가 필요한 경우, 정해진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는 권한도 추가됨. 제108회 의회동안, 양원은 정부 외부에서 소집하는 것에 대한 동의 H.Con.Res1에 합의함. 이는 하원의장과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가 상하원이 워싱턴 디씨 외의 장소에서 소집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임.

비상상황에서의 하원 보궐선거 및 임시의장선출에 대한 우려사항

제109회 의회(2005-2006)에서 하원에서 대량으로 공석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음. 비상 상황이란 공석이 100석을 초과하는 경우이며 49일 이내로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공석 발표 후 15일 이내에 군인 및 해외유권자에게 부재자 투표용지를 발송해야 함. 하지만, 각 주에서는 보궐선거와 관련해 비상 상황에서 의회가 정한 시간내에 보궐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 우려가 있음. 7주라는 짧은 기간이 보궐 선거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해외 및 군인 유권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음. 또한, 임시의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음. 하원 규칙에 따라 의장이 사망하거나 신체적 기능이 불가능한 경우, 후임의장 혹은 임시의장이 선출될 때까지 명단을 서명하여 제출해야함. 의장직이 공석일 경우, 하원의 첫번째 업무는 의장 선출이며 이는 보통 의회가 소집되는 첫날에 발생함.

헌법적인 접근 및 수정안

미국 의회 구성원의 임시 보충을 위한 헌법 수정에 대한 지지자와 반대자의 입장은 다름. 지지자들은 큰 재난,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의회 구성원이 다량으로 사망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사전에 정해진 절차를 통해 의회가 계속해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함. 반대자들은 기존 체계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임시 의원 선임은 국민들 사이에 불안감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선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임시로 선출된 의원과 선거로 통해 선출된 의원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음. 헌법 수정안은 공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11테러 발생이후와 냉전시대(1946-1962)사이에 많이 제안되었음. 이는 공석을 채우는 조건, 공석의 수, 후임자 선정 방법 등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음. 대다수의 수정안은 공석문제에 집중하고 있으며, 장애나 실종 의원에 대한 상황에 대한 명확한 해결은 어려운 상태임.

<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0628>

미국의회조사국(CRS) 보고서 현황

<p>● 미국 핵 안보 기업: 배경 및 의회 문제 가능성 (10.3) (The U.S. Nuclear Security Enterprise: Background and Possible Issues for Congress)</p>	<p>● 미국 관세 정책 개요 (10.3) (U.S. Tariff Policy: Overview)</p>
<p>주요내용: 2000년에 설립된 미국에너지부 자율기관인 국가핵보안국(NNSA)은 핵 무기 재고 관리 및 현대화, 관련 인프라를 재자본화를 담당함. 2024년 현재 미국국방부를 위한 일곱 개의 핵 무기 현대화 프로그램을 진행중임. NNSA의 FY2025 예산요청은 199억 달러로, 향후 예산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의회는 NNSA의 예산 승인과 감독을 통해 프로그램 실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인력 관리 및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명함.</p> <p>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R/R48194</p>	<p>주요내용: 미국의 관세 정책은 의회와 대통령 간의 협력으로 형성됨. 헌법에 따라 의회는 관세 부과와 외국과의 상거래 규제 권한을 가지며, 대통령은 국제 협정 협상 권한을 가짐. 현재 관세는 수익원로서의 중요성이 감소하고, 미국의 국제 무역 및 외교 정책 도구로 변모함. 지난 70년 동안 관세는 연방 수익의 2%를 넘지 않았음. 80년 이상 의회는 관세 설정 권한을 대통령에게 위임해 왔고, 이는 의회를 국내 압력으로부터 보호했지만 저관세, 규칙 기반 글로벌 무역 시스템의 추진이 대통령 재량에 의존하게 만들었음. 트럼프 행정부는 저관세 정책을 비판하고 특정 품목에 따라 관세를 대폭 인상했으며,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이러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음. 이에 따라 의회는 위임권한이 자신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p> <p>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F/IF11030</p>
<p>● 청정차량세액공제섹션30D의 외국우려기관요건(9.25) (Foreign Entity of Concern Requirements in the Section 30D Clean Vehicle Credit)</p>	<p>● FY2025 국방 예산: 자금요약 (9.18) (FY2025 Defense Appropriations: Summary of Funding)</p>
<p>주요내용: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청정 차량 세액 공제(CVC)는 개인과 기업이 적격 전기차(EV) 구매 시 최대 \$7,500 또는 \$3,750의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023년 이후 차량의 배터리 부품은 외국우려기관(FEOC)에서 제조되거나 조립되어서는 안 되고, 2024년 이후에는 배터리에 사용된 주요 광물이 FEOC에 의해 처리되지 않아야 함. FEOC는 미국에 경제적 또는 안보 위협을 가 할 수 있는 행위자를 지칭하며, 주로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의 기업들이 포함됨. 국세청(IRS)은 FEOC를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FEOC 금지를 고의로 위반할 경우 해당 제조업체의 판매되지 않은 차량은 CVC 자격을 잃게 됨. 또한, 리스 차량에 대해서는 CVC가 적용되지 않아 차량 딜러가 규정을 지키지 않은 차량에 대해 세액 공제를 청구할 수 있는 구멍이 존재함.</p> <p>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2322</p>	<p>주요내용: 바이든 행정부는 FY2025 예산으로 총7조 4,840억 달러는 요청함. 이 중 국방부에 8498억 달러(11.35%)의 재량 자금과 225억 달러(0.3%)의 의무자금을 포함시킴. 하원(H.R.8774)은 8330억 달러의 재량 예산 권한과 5억 달러의 의무 프로그램 자금을 통과시켰으며, 이는 FY2024 수준보다 85억 달러(1%) 증가한 것임. 반면 상원(S.4921)은 재정책임법안(FRA) 한도를 고려해 8309억 달러에 208억 달러의 비상 요구 사항을 포함해 총8522억 달러를 제안함. 두 법안 모두 군사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배분이 정치적 우선순위와 법적 한도에 따라 조정된 결과를 보여줌.</p> <p>https://crsreports.congress.gov/product/pdf/IN/IN12425</p>

발행일 2024년 10월 18일

발행처 한미의회교류센터

『KIPEC BRIEFS』는 한미의회교류센터가 고객을 대상으로 월 1회 발행하는 미국 의회 입법 및 현지 소식입니다.